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사회적 자본’의 벽을 넘어

백 승 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인간 사회의 성격을 꿰뚫어보았다. 그가 사용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만 해도 그렇다. 파리 중산층 자녀들에게 소르본 대학교의 졸업장은 출세의 날개를 달아주지만, 시골 농부의 자녀들에게는 별 쓸모가 없다는 말이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회적 자본 여하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 서울의 명문가인 ‘경화세족(京華世族)’들은 대대로 습득한 시험비결에 힘입어 수월하게 문과에 급제했다. 그들은 노른자위 벼슬만 지내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시골 수재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시험에 합격하고도 좌절한 것과는 딴판이었다.

과거시험 자체는 상당히 공정하였다. 조선 후기의 정규시험에서 문과 합격자 중 평안도 출신이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그들의 행운이 합격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들 벼슬은 기껏해야 성균관 전적(典籍) 또는 시골의 현감이나 군수였다. 하릴없이 고향에서 벼슬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조선사회의 ‘용’이 되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사회 부조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항거했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었으나, ‘용’이 될 행운을 기다리느라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사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 당시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 인구는 50만 명도 넘었다. 시험지옥이었다. 많은 선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치질과 위장병에 시달렸다. 서울의 젊은 선비 유만주(兪晩柱)도 그렇게 병고에 시달리다 34세에 요절했다. 그래도 그는 ‘흠영(欽英)’이라는 일기책을 남겨 후세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니 다행이었다.

문제는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높이 평가할 만하였다. 서양 여러 나라는 프랑스혁명(1789)이 일어난 다음까지도 그만큼 공정한 인재등용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조선사회가 ‘능력 본위’로 인재를 뽑아썼다는 사실은 길이 기억해야 할 일이다.

조선시대에는 총 1만4620여 명이 문과에 급제했다. 해마다 30명 정도 합격한 셈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20~30년씩 과거공부에 정진했다. 두세 살 때부터 말과 글을 동시에 배우기 시작했다는 선비들도 많았다. 조기교육 열풍도 있었고, 시험 열기도 뜨거웠다.

예외도 없지 않았다. 연암 박지원(朴趾源·1737~1805)은 과거시험을 보이콧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 집안은 노론 중에서도 영조와 뜻을 달리 한 ‘청명당(淸明黨)’ 계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지원으로서는 영조의 조정에 나아가기가 불편한 노릇이었다. 그가 백지 답안을 내는 등의 기행을 벌인 것은 정치적 고뇌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박지원에게 벼슬길이 열렸다. 기다렸다는 듯 벼슬길에 나선 그는, 아들 박종채(朴宗采·1780~1835)의 과거시험 공부도 닦달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끝내 합격하지 못했다. 재주가 부족해서였을까. 문과에 급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조선 후기에는 과거시험과는 거리가 먼 인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내가 ‘평민 지식인’이라 부르는 이들인데, 최제우(崔濟愚·1724~1764)와 강일순(姜一淳·1871~1909)이 대표적이었다. 그들은 동학과 증산교를 비롯한 신종교 운동을 통해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선사회에 선사했다.

1894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고시천국이다. 현재의 ‘고시’는 물론 서양의 고등고시제도를 본뜬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제도는 19세기 영국 사람들이 중국의 과거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유럽 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 제도의 장점에 놀랐다. 중국과 한국도 그 제도를 역수입했다.

고시에 이어 ‘언론고시’와 ‘임용고시’까지 등장해 우리 젊은이들은 시험지옥에 산다. 대기업의 취업문도 바늘구멍이다.

하지만 경쟁이 심할수록 ‘사회적 자본’은 위력을 발휘한다. 대학입시만 해도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수적이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다.

한국사회, 이대로는 어렵다. 세습적인 ‘사회적 자본’의 위력을 줄일 방법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 선발의 방법을 모색할 때다.

의료칼럼

원격의료·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이유

최 동 석
광주시의사회장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 지난 50년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국민평균수명이 늘어난 나라이다. 그만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빠른 향상은 경제발전 이유도 있지만, 매우 높은 의료접근성과 이에 따른 높은 의료이용률도 큰 요인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병원 방문율은 OECD 평균의 2배지만 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58%), 의료관계 인력은 0.3배(30%) 수준이다. 그 이유는 OECD 평균의 1/3이 채 못 되는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다.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높은 의료이용률에도 총 의료비가 적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책정해놓은 건강보험수가(진료수가)는 원가의 75% 수준이다. 즉,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진료만 하는 경우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의료기관은 불합리한 보험수가 때문에 특진비, 상급병실료, 비보험 진료 등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국민은 낮은 의료비 때문에 혜택을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가계가 재정파탄에 빠지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이다. 의료비에 대한 정부 보조가 매우 적고, 의료비의 많은 비중이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도록 입법을 추진중인데, 이것은 병원경영손실의 원인인 저수가는 그대로 두고 편법을 권유하는 미봉책이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나 야당이 의심하는 대로 의료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이 알려진 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형태라면 공공의료의 확립,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법의 보완 등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선결과제를 미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의 추진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원격의료가 필요한 이유로 의료접근성 향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임상의사의 밀도가 약 100배로 높고, OECD국가 중 국민들의 외래 방문률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 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가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 벽지 주민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고 익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격진료는 의료사고의 위험 마저 높다. 원격의료에 투입될 예산을 지방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확충하고 방문 간호 사업을 늘리는 것이 환자의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동안 원격진료를 꾸준히 준비해왔던 대형 대학병원들의 독차지가 되거나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비정상적 의료기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0년, 인터넷 사이트 ‘아파요 닷컴’을 통해 당시 5명의 의사가 단 이틀 동안 13만여명을 인터넷으로 진료하고 그 중 7만 8000여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 보건을 고려하는 의학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 단독의 입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와 긴밀한 협의 후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현재 의사협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시위가 아니다. 그것은 36년 동안이나 지속된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은 채 진료실을 벗어나 투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고

인성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하 영 철
미래로 학교교육 도우미 대표

학생들의 폭행, 왕따, 자살 사건, 학생이 교사를 폭행, 성희롱 하는 작금의 사태를 두고 학교의 인성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성교육 박람회’까지 열어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고운 인성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길러질 수 있을까? 약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생각한다. 바른 인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성 형성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종이와 연필을 갖고 태어나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며 살아간다. 그림을 그릴 때 종이나 연필의 질도 중요하지만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밑그림은 자녀 스스로, 부모의 도움으로 영유아기 때 그리는 것으로, 유전적 숙명론과 가정의 환경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인성이란 성격과 도덕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5~6세를 성격의 지문기, 0~3세를 뇌 발달과 도덕성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한다. 인간은 영유아기 때 학습 된 지식과 정보, 경험이 잠재적 뇌 속에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어 일생을 살아가며 그것을 꺼내 쓴다고 한다. 그러기에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부모의 가정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을 생각해야 한다.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생아는 커서 내향아가 되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생아는 외향아가 되며, 출생 후 2~3개월부터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인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비행, 성인들의 부도덕성은 발생의 근본을 찾아 교육해야 한다.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토론을 통하여, 법제화를 통하여, 기구를 만들어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각한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경험한 아이가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75년을 추적한 연구 발표나, 김수환 추기경의 가슴 사랑의 강조는 숨어 있는 뇌에 잠재된 학습내용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가정에서, 형제자매가 뒹굴고 자란 가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는 고운 인성을 갖게 됨을 생각하자.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이 고운 인성을 갖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이혼율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그리고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정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금슬 좋은 부부관계가 중요함을 생각할 수 있고,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한 자녀만 낳아 잘 기르는 것은 두세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보다 자녀의 인성 형성에 문제가 많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사교육비 등 출산율을 낮추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고운 인성을 지닌 청소년을 기르는 길임을 생각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 태도를 학습하며 자란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는 것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함을 생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3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고 그게 어려우면 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교육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찾아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는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 교육도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르치기보다는 주어진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성은 타율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특성이며, 성격화,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수업 중에 예절 지키기,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기 등을 가르칠 수 있고,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을 먹으면서도 배려하고 협동하며, 예절을 지키고, 근검절약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 성격과 도덕성. 그것은 가정에서 영유아기 때 가르쳐야 하는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유전적 숙명론으로만, 교육적 환경론으로만 생각지 말고, 가정적 환경론에 입각하여 ‘줄탁동시’, ‘nature with nurture’의 의미를 살린 가정교육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그리고 성인들의 모범적인 행동과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 청소년들은 건전한 인성을 갖고 자랄 수 있을 것임을 생각하자.

社 說

자치단체 파산제 검토, 낙후도 전제돼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틀 전 가진 신년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지방 파산제도 도입이었다. 황 대표는 “올해를 지방정부의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 파산제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산제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모두 172조 원으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방의 파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부실만을 기준으로 파산제를 운용한다면 광주·전남에서 살아남을 자치단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지난해 40.0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다. 전남도 역시 16.3%로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가장 낮다.

전남도내 일선 지자체는 더욱 열악해 강진(7.3%), 함평(7.9%) 등 10% 미만이 7곳, 보성(10.2%), 완도(10.8%) 등 10%대도 9곳에 달한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광주 동구와 남구 등 2곳, 전남에선 무려 11곳에 이른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공정할 룰이 전제가 돼야 한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는 주자를 동일선상에서 출발시킨다면 탈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통해 자립도를 높여주고, 낙후도를 반영한 차등 평가를 해야 제대로 굴러 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만일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자치단체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방재정 부실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교부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하고, 기초연금 등 복지비를 지방에 떠넘긴 게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魔의 도로’ 개선 부진 귀한 생명 앗아간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이른바 ‘魔의 구간’이 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자치단체는 관련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땜질식 공사로 일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2년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13곳, 전남 16곳 등 모두 29곳에 도로 여건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점에선 사고도 많을 뿐더러 인명피해 또한 심각하다. 한 해 발생한 사고만 414건에, 11명이 숨지고 757명이 부상을 당했다.

공단에서는 매년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 중 피해가 가장 큰 곳의 상황을 분석, 개선사업의 우선 순위를 매겨 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한다. 이들 지점에서 유독 사고가 많은 것은 도로 선형개선이나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돈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교통여건 개선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은 고작 5억9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투입했던 17억6200만 원보다 33.5% 줄어든 액수다. 전남도 역시 올 사업비는 지난해 33억5400만 원의 32.6%인 10억9600만 원만 편성했다.

이처럼 도로개선 관련 예산이 태부족한 것은 정부가 보육비 확보 등을 위해 교통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빚어졌다.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정부의 땜질식 예산운용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 교통사고 예방에 써야 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다. 당국은 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도로가 엉망이어서 피해를 입는다면 사고를 유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無 等 鼓

취업 8대 스펙

최근 청년 취업자 감소와 함께 ‘고용의 질’도 악화돼 ‘삼포세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삼포세대’란 젊은 세대의 고용불안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신조어다. 또한 우리나라 젊은이 5명 중 한 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전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취업자들 사이에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8대 스펙’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8대 스펙이란 학벌,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의 기존 5대 스펙에 수상 경력과 인턴 경험, 봉사활동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스펙을 쌓으려면 대학 4학년간 등록금 외에 수천 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 간다고 한다.

유치원부터 시작된 영어 조기교육으로 사교육에 발을 내디딘 후,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 졸업 이후까지 끊임없이 돈을 들여야만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취업사진 전문점은 머리를 만져주고, 화장을 한 후 사진 한 번 찍는데 7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도 취업준비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면접 준비생을 위한 90분짜리 일대일 스피치 학원도 1회 20만 원이 넘지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니 취업의 절박함을 실감케 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드나드는 학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인문계의 경우 토익과 영어 스피킹에서부터 한자·한국어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한 취업정보업체가 국내 주요 대기업 합격자 1400여 명의 평균 스펙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높은 학점과 토익점수, 어학연수, 인턴, 수상경력 등 이른바 8대 스펙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펙을 모두 갖추는데 대학등록금을 제외하고도 2000여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로 대학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학생들에겐 어떤 시각으로 비칠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사성어가 이젠 취업 전선에 마저 스며들고 있어 답답하고 씁쓸하다. 지난해 말 전국을 열광시킨 ‘안녕들 하십니까’가 더욱 크게 다가선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본부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 1부	2200-661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